

광주시·한전·해양에너지 '고독사 예방' 협업 나선다

시, 고독사 예방 정책 보고회...동네 상점 등 연대 신고 체계 구축 전력사용량 데이터 분석...AI 활용·전수조사 후 돌봄서비스 연계도

광주시가 한국전력공사, 해양에너지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철 한전 사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 이사, 5개 자치구 통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정책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한전·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 징후 감지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독사 고위험군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방식이다.

해양에너지 고객센터 상담원들도 고독사 위험 시민과 1대1로 매칭해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한다.

공인중개업소·편의점 등 동네 상점과도 연대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웃지킴이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고독사의 76.6%가 4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올해 광주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위험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네를 잘 알고 있는 2400명의 통장이 참여해 고립 위기가구도 찾는다. 통장들은 집 앞에 우편물, 전단지 등이 쌓여 있거나 심한 악취가 나는 가구를 점검하고, 위기가구로 의심되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신고한다.

이 같은 발굴·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살핌과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또 고립이웃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이웃지기' 시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보이스봇 안부 전화와 움직임센서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긴급출동하는 안심 체계도 운영한다.

강기정 시장은 "고독사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라며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잘 지원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 정책 보고회'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당부...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 보수

오늘부터 1·2시설 순차 진행...노후 설비·부품 교체 등

광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 제1·2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보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연중무휴 운영과 부패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특성상 빠른 기계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가동정지 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기적 보수를 하고 있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150t/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300t/일)은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보수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는 소모성 부품과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법정검사를 진행하며, 보수기간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보수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평상시 용량의 20% 정도를 증량 처리하는 동시에 민간시설 2개소에 분산해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보수기간 음식물류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만큼 장보기, 먹을 만큼 조리하기,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 등 시민의 생활 속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에 쇠붙이·철판·비닐봉투 등 이물질 유입으로 시설 고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물질 제거 배출 등 올바른 배출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운원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감량사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주시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보수인 만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우수 향토기업 매년 10곳 발굴 육성

전남도, 2028년까지 50곳 지정 27일까지 접수...다양한 혜택 지원

전남도가 전남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한 우수 향토기업 매년 10곳씩을 발굴해 지원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8년까지 5년간 총 50개사의 향토기업을 발굴해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하며, 인증 기간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판로 지원사업 공모 가점 등 여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향토기업 신청을 하려면 분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전남에 있고,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

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기본 조건을 전제로 ▲경제적 기여(업력·매출액 증가율·수출 기여도·기업 신용평가) ▲사회적 기여(사회 기부·직원 복지·고용 증가율·장기 고용 유지) 2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향토기업 인증은 오는 27일까지 전남도 중소기업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미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여야 원내대표에 '5·18 정신 헌법수록' 협조 요청

강 시장,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 전달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를 전달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국회 보고 후 후속조치 협력 ▲'비유과 성찰'의 5·18기념행사 적극 동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원년으로 삼았다"고 강조한 뒤 "44년 전 광주는 고립돼 외롭게 싸웠지만, 오늘 광주는 오월을 기억하고 알리는 친구가 참 많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의 과제로 삼고 큰 걸음을 내딛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여 활동을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6월 말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보고되면, 5·18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기정 시장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특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데다 여당의 공약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 발전을 위해 해주신 말씀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용역 추진

치유 프로그램 등 개발 계획도

'유기농 생태마을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라.'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4개월간 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기농 생태마을 현황을 분석하고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생태마을의 지속적 성장과 주민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구

상이다.

전남도는 또 용역을 통해 교류·휴식·운동 치유 등 3가지 치유농업 유형을 생태마을과 접목해 치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도 유기농 생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을 100곳(매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회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